

하도급대금 채권신탁제도 설명회

건설현장을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Solution, CleanPay

신한은행 기관솔루션부 | 정수길 (☎ 02-2151-5573)



≫≫ 제안 배경

건설 현장 Solution의 New Normal

■ 정책 방향

2019년

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

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

2020년

☑ 임금직접지급제 시행

계좌압류 방지
차세대 체불e제로(국가철도공단)

2024년

☑ 하도급대금 채권신탁제도 활용

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에 따른
체불방지 목적의 채권신탁제도

■ 서비스 현황

1세대 대금지급 서비스

- ① 전용계좌 개설 (공공4개, 민간2개)
- ② 본인 몫 이외 인출 제한
- ③ 모든 근/장/재 협력사별 대금 청구
- ④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

2세대 대금지급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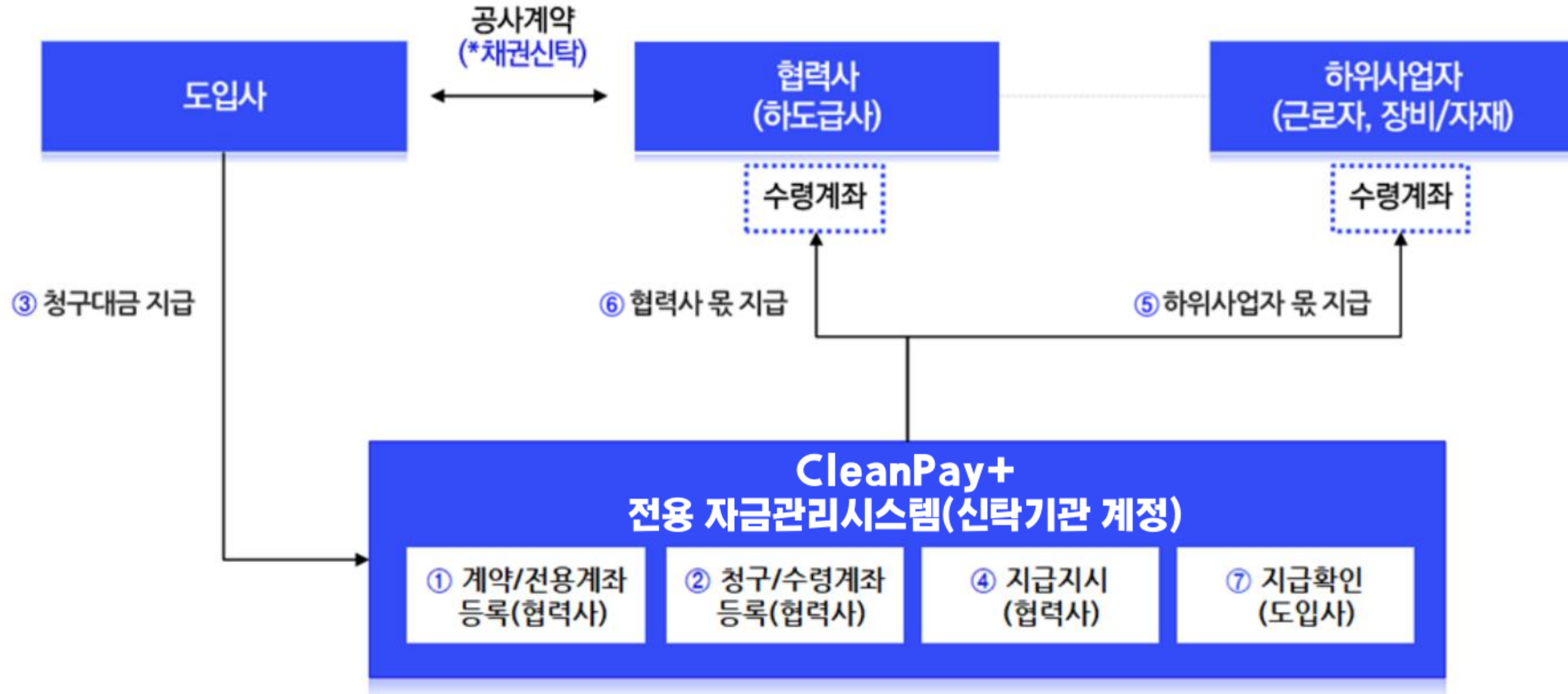
- ① 전용계좌 불필요
- ② 자동생성 1개 계좌를 통한
하위사업자 직접지급 가능
- ③ 기타 : 1세대 서비스와 동일

3세대 대금지급 서비스

- ① 하도급계약에 기반한 장래
매출채권을 신탁기관에 위탁
- ② 하도급대금의 신탁기관 지급
- ③ 기타 : 2세대 서비스와 동일

» 구조도

원도급사, 하도급사(근/장/재 까지) 본인 몫만 대금 수령하는 자동화된 직불 구조



*채권신탁 : 하도급계약에 근거 장래매출채권을 신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입사는 기성금을 신탁기관으로 지급, **협력사의 부실발생 시** 신탁계약에 따라 **하위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(직접지급)**하는 일종의 금융서비스 (근거: 신탁법 제22조 / 강제집행 금지)

장점

업계 최대 업력을 기반으로 한 장점 다수 보유

주요 장점

· 체불방지

- 대금지급시스템과 채권신탁 연계
- 압류(협력사)와 가압류(도입사)時 지급 가능

· 업무개선

-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- 선급금 관리 기능으로 협력사 재무지원 가능

· 비용절감

- 도입사 : 시스템 이용료 無
VAN, 이체수수료 無
- 협력사 : 신탁보수료만 발생
(월 2~3만원 수준)

정책과 주요 기능

2. [문제점]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 파악

□ 대금지급시스템 기능에 일부 한계

① 건설사 계좌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사 압류청구 시 하수급인 몫, 임금, 자재·장비대금도 함께 압류되어 체불 발생 가능

【사례 1】 하수급인 부도·계좌압류로 인한 체불 사례
○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 크레인 장비업체(6개사)에 대해 총 5.4억 대금 체불

< 현 대금지급시스템 구조도(조달청 하도급지킴이) >

② 건설사의 선급금(선금) 사용, 선지급*(사기성) 내역 등 기록이 지급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자금의 목적 내 사용 확인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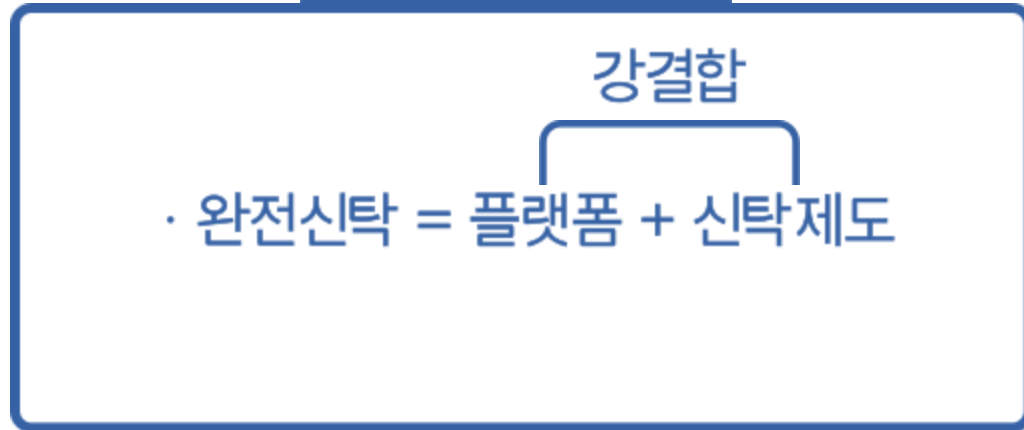
- 정식기성은 2~3개월마다 이루어지나 임금 등 매달지급을 위해 건설사가 근로자 등에 선지급
- 지급받은 선급금을 목적 내 사용(자재·장비대금 지급 등)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사가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
- 발주자는 선금 지급 20일 이내에 선금이 원·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만 확인 (『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(계약예규)』 제36조)
- 선지급시 시스템을 사용토록 세부운영기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아 적정히 지급하였는지 수시 확인 곤란

- 직접지급 동의 확인 기능
- 직불대상자 수령계좌 등록/검증 기능
- 근/장/재 계약내용 등록/확인 기능
- 건설사계좌 거치지 않는 기능
- 대금유형별 지급기일 통제 기능
- 대금지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
- (가)압류방지 기능(필요시)
- 조직/부서 관리 기능
- 조직별 업무권한 통제 기능
- 업무별 내부결재선 관리 기능
- 선급금 사용계획 등록 기능
- 선급금 사용통제/정산 기능
- 선지급 등록/승인 기능

※ 2020년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 배포자료

- point** v 제도만 있는 경우 단점 : 강제집행 방어 불가, 수작업 한계, 신탁기관 지급 처리 불가
- v 시스템만 있는 경우 단점 : 즉시 적용 가능 여부(법률 검토, 신탁구조, 사례 확보)

신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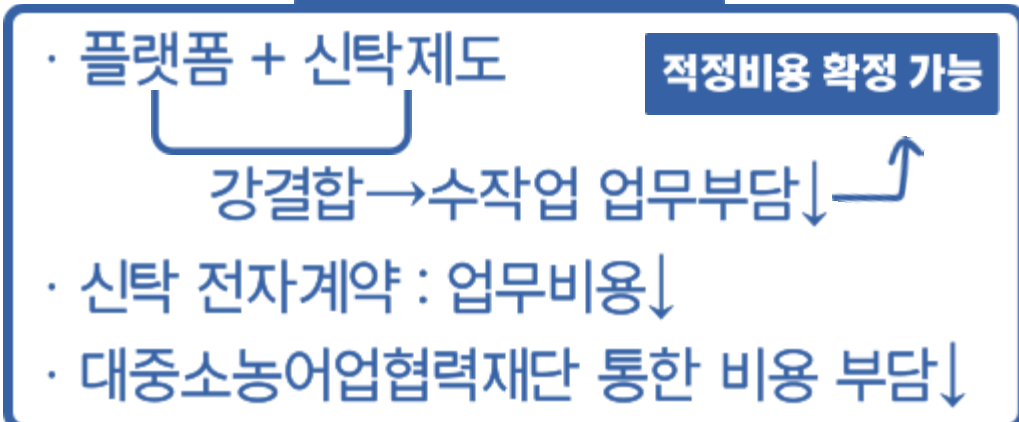
point

- v 특정 은행계좌 신규 개설 필수 여부
- v 유연한 지급구조 적용가능 여부
- v 정산분쟁 해결 기능 포함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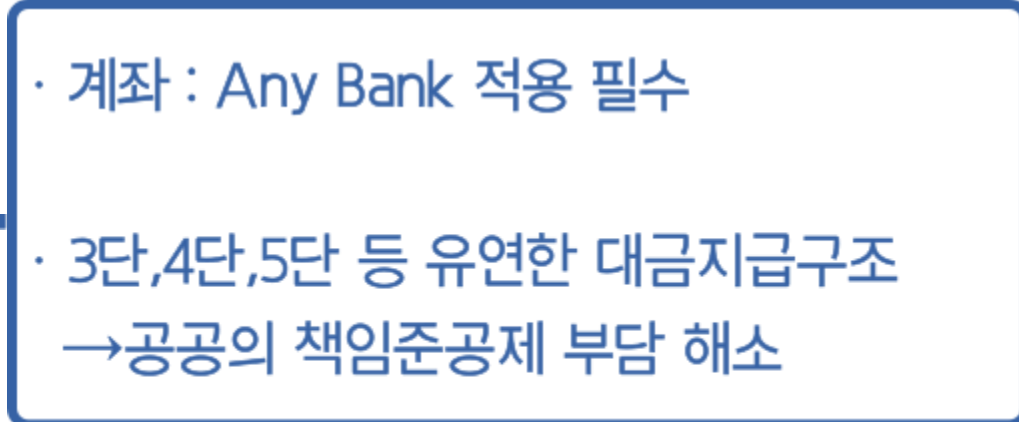
point

- v 합리적 가격 여부
- v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가능 여부

**비용
적정성**



**도입
효율성**



**신탁연계
핵심
선택기준**

- point** v 전문성
- 업계 최다 업력(14년) 및 채권신탁 검토 3년
신탁 제도와 플랫폼 구축 최고 노하우 보유
- ※ N사의 민간대금지급 플랫폼 : 3단 구조만 가능(발주기관 시스템 참여 불가)

» 사례

이미 현장에서 도입중인 검증된 서비스

■ 신탁 연계 적용 사례

| 도입기관 구분 | 기관명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민간업체 | SM동아건설산업 |
| | (주)대림 |
| | 신영씨앤디 |
| | 마곡CP4(태영건설현장) |
| | 신한자산신탁 |
| | 대주전자재료 |
| 공공기관 | 대구굿모닝병원 |
| | 광주광역시도시공사 |
| | 장흥군 |
| | 전남개발공사 |
| | 울산복합도시개발 |

※ 그 외 CleanPay 13개 기관 운영중

■ 사례 분석

Case I

A건설사

- ① 하도급사 Risk 보완 목적
- ② 책임준공제 부담에 따른 공공발주 현장 도입 추가 적용 예정 (공공기관 인정)

Case II

B건설사

- ① 기존 계좌방식 서비스 문제점 해결 (절차 및 기능)
- ② N증권 신탁연계 비용부담에 따른 클린페이 선택

Case III

C신탁사

- 하도급사 Risk가 예상되는 현장에 CleanPay 바로 적용 (하도급사 부실 전)

Case IV

D건설사

-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확인 결과, 수수료 부담 완화 가능